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본격화

전주시, 상반기 본격 착공·무상귀속·공공기여 시설 실시설계 추진

전주의 변화를 이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시공자 선정과 감리자 지정,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부지 내 무상귀속 시설과 공공 기여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와 더불어 공공기여 시설의 설계부터 공사 까지 전 과정을 관리·감독할 건설사업 관리 용역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돼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와 재해·재난·환경·안전·교육환경·소방 등의 영향 평가 및 심의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 후 지난해 9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의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심 속 유 휴부지로 폐식면 건축물이 빙자돼 시민 건강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자광과 사전협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조감도.

12월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간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기준에 대해 공공기여로 2,528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100억 원은 교통문제 해 결을 위해 △홍산로 지하차도 △홍산교~서곡교 언더패스 △마전교 확장

△마전들로 교량 신설 △세내로 확장 △효자동 주민센터 신축 등의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시는 나머지 1428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중 현금으로 분할납부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는 부지 내 무상귀속 시설로 약 467억 원 상당의 도로와 경관녹지, 균린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지역사회 풍경을 위해 약 360억 원 상당의 전주 시립미술관을 건축해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는 지역사회 공공 기여 시설을 위해 △교육 강의 △소외 계층 돌봄 △지역 문화 지원 △지역 경제 상생 등의 사업을 공사 준공 후 연간 25억 원 이상씩 20년간 자발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해 총 3855억 원 상당의 공공시설과 현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업시행 협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공사 시 하도급을 포함한 도급공사와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은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공사 시공 시 지역업체를 50% 이상 참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점점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기여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 확대

2026년 새해부터는 56세(1970년생)를 대상으로 한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게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종합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게 확진검사비(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분인부담금을 최초 1회(상한액 7만 원)에 한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진진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지난해 지원 대상자(1969년생)가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 활용 협력 ‘맞손’

전주시-전북대 첨단모빌리티 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지역 드론산업 발전과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시와 전북대 첨단모빌리티 사업단(사업단장 이덕진 교수)은 6일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임숙희 경제산업부 장관과 이덕진 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를 활용하는 드론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대 재학생 등은 센터 2층에 구축된 드론축구 경기장을 시험 중인 드론 기체의 비행을 테스트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양 기관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드론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호 협력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가 드론



전주시가 지역 드론산업 발전과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드론 관련 실습과 교육 등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대 첨단모빌리티사업단도 기존 시험용 드론의 비행 테스트를 위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멀리 시외 지역의 공원 등을 찾아 시험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센터의 실내 경기장을 활용해 기꺼운 논의에서 안전하게 테스트 비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전주드론스포츠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

시교육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반기 중 초등·중·고등학교 교육수업으로 20학급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인 센터에 대해 드론축구 대회와 리그 등 연간 30회 이상의 대회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일반시민 대상 드론축구 강좌와 청년 등이 활동 등을 이벤트를 활용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지속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취임식

제22대 강민철 회장 연임



강민철 회장(사진)은 “그동안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협력과 열정이 전주시 주민자치의 큰 힘이 돼온다”면서 “앞으로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항상 지역의 리더로서 화합과 발전을 이끌며, 주민과 행정을 있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오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주민자치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전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전주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3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 주도의 지역 공동체 형성과 생활 밀착형 자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 참여 확대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산하 기관 채용 정보 ‘한눈에’

통합 제공 서비스 개시

집·청소년센터 등)의 정규직·기간제·단체인력(육아휴직) 채용 등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가 지난해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퇴사자 발생에 따른 수시 채용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을 포함해 약 2000명 정도의 채용이 진행됐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연간 채용계획은 1100명 정도지만 퇴사자 발생 및 육아휴직에 따른 수시 채용 등으로 1500명 정도의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1월에는 100명 정도의 채용계획이 개시될 예정이다.

청년 구직자들은 그동안 전주시청 및 시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청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각 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의 개별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시는 분산된 각 기관별 채용공고를 취합·정리 후 오는 8일부터 매 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youth.jeonju.go.kr) 내 ‘모아-JOB’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채용 정보는 △전주시청 각 부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 출연기관(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사업진흥원 등) △시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기관(복지관·어린이집·오프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전선 전주시 청년일자리과장은 “많은 청년을 만나면서 시 공공부문 채용 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 제공 요구 등의 목소리가 있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통합 서비스 시행으로 청년들이 편리하게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민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노리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사거리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획된 노력을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종중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겸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영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김영 건물을 복원했다.

관공각



전주매일 캠페인

내아

